



GS칼텍스,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 협력

GS칼텍스는 지난 8일 서울 명동 나인트리 호텔에서 해양수산부, 한국석유관리원, 부산항만공사, 울산 항만공사와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GS칼텍스 장혁수 제품부문장(왼쪽부터), 한국석유관리원 이경홍 사업이사, 해양수산부 윤현수 국장, 부산항만공사 이상권 부사장, 울산항만공사 정순오 부사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GS칼텍스



SK에코플랜트-테르메그룹, 기술교류 업무협약

SK에코플랜트는 지난 8일 서울 중로구 SK에코플랜트 본사에서 글로벌 리저트 기업 테르메그룹과 '인전 골든하버 부지 리저트 개발·시공 및 기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왼쪽 세번째), 로버트 하네아 테르메그룹 회장(네번째)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



기보-케이뱅크, 비대면·디지털 기반 금융지원 MOU

기술보증기금이 케이뱅크와 '디지털·비대면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통합 금융서비스 제공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중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왼쪽부터)과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삼육대, 이민희 학생 '대통령과학장학생' 선발

삼육대학교 화학생명과학과 이민희(4학년) 학생이 '제21회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삼육대는 지난 19회, 20회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대통령과학장학생을 배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육대 화학생명과학과 4학년 이민희 학생(왼쪽)과 김일목 총장이 대통령과학장학생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삼육대

부음

- ▲민경재씨 별세, 최완용 씨 부인상, 최원철·원재·수정·문정 씨 모친상, 김현재·손영택(국무총리비서실장)씨 장모상, 김동은 씨 시모상 = 10일, 대전시 충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2일 오전 9시 30분, 장지 정수원-대전추모공원. (042-280-8181)
- ▲이양순(전 감사원 감사위원, 전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씨 별세, 이민숙씨 남편상, 이환석(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이환성(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실장)씨 부친상, 홍성욱·홍수진(약사)씨 시부상, 이상진(삼성바이오로직스)·이윤호·이윤재씨 조부상 = 9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12일 오전 7시. 02-2258-5940

피의자 참여권 보장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법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 임의제출물의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해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그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

련된 전자정보에 해당하는 출력물 등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한편, 피해자나 증거는닉범 등 제3자가 피의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피의자에게 참여권 등 절차적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과 견주어 보더라도 피의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즉,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해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호되어야 하는데, 이때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가 무엇인지 문제될 수 있다. 피의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고 볼 수 있는 피의자에게 참여권 등 절차적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과 견주어 보더라도 피의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즉,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또 다른 범행을 발견하고 그에 관한 동영상, 사진 등을 영장 없이 복제한 CD를 위 다른 범행의 증거로 제출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휴대전화를 제출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제출할 당시 그 안에 수록된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담당 경찰관들도 그에 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휴대전화에 담긴 전자정보 중 임의제출을 통해 적법하게 압수된 범위는 임의제출 및 압수의 동기가 된 해당 피해자의 사건에 국한된다"고 보았다. 피해자 및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도 별개인 전혀 다른 범행과 관련된 전자정보까지 임의제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전영장 없이 이를 취득한 이상 위 별개의 전자정보들은 증거능력이 없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압수절차가 진행되었다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다른 범행은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법무법인 바른

한일시멘트 우덕재단, 장학제도 개편... "소방관 등 의인가정 지원"

기존 장학금 '우·덕' 세분화 "공익사업 지원 아끼지 않을 것"

한일시멘트 우덕재단이 순직 경찰, 소방관 등 의인 가정을 돕기 위해 기존 장학금 제도를 '우' 장학금과 '덕' 장학금으로 세분화하며 지원 대상을 넓혔다. 10일 한일시멘트에 따르면 '우(友) 장학금'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의인 가정(순직 군인, 경

찰, 소방관 가족),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장애 가정, 기초생활수급가정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다. 선정시 1년간 장학금을 지급한다. 우 장학금은 우덕재단 홈페이지에서 이달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덕(德) 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각 학교별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선발 후 대학생은 졸업시까지, 대학원생은 1년간 장학금을 받는다.

우덕재단은 홈페이지도 새로 단장해 장학금 신청 페이지와 문의사항 게시판에 신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우덕재단은 매년 100여명의 장학생을 신규로 선발해 연간 300여명의 장학생에게 졸업 때까지 장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우덕재단의 지원을 받은 장학생은 5659명에 달한다. 설립 이후 약 40년 간 157개 학교, 34개 연구기관, 39개 공익단체에 총 400억원을 지원해왔다.

우덕재단은 한일시멘트 창업주인 우덕 허재경 선대회장이 지난 1983년 당시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과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참된 일꾼을 발굴, 육성한다는 취지로 설립했다. 현재는 허정섭 명예회장이 이 사장을 맡고 있으며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이 지원하고 있다. 우덕재단 박승규 총장은 "40년 넘게 지속된 사회공헌 활동이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이노비즈협회, 임기근 조달청장 간담회 인증제 개편 등 현안 논의... "조달기업 정책 성공 뒷받침"

계약 처리기간 등 규제개선 건의도

이노비즈협회가 임기근 조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혁신 조달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논의했다. 이노비즈협회는 지난 7일 경기판교 협회 회의실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초청 이노비즈기업인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월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범정부 협업을 통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정책 현장 방문을 통해 조달 정책 성공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기술혁신 이노비즈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노비즈협회에서 정광천 회장을 비롯해 보광아이엔티 차순자 대표, 엔티모아 장병권 대표, 스마트프라이 박기주 대표 등 8명이 참석했다.



지난 7일 경기 판교 이노비즈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왼쪽 4번째부터)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임기근 조달청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노비즈협

조달청에선 임 청장을 비롯해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 등 5명이 자리를 했다. 간담회에선 ▲기술혁신 노력을 반영한 인증제도 개편 ▲혁신제품 시범구매 및 R&D 확대 ▲기술혁신 기업 해외진출 협력 등 이노비즈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현안들을 논의했다. 계약 업무처리 기간 단축 등 현장규제 개선 건의

도 함께 이루어졌다. 정광천 회장은 "혁신제품, 우수조달품목, G-PASS에 이르는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체계에서 이노비즈기업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노비즈기업은 공공조달 정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혁신적 조달기업 정책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홈쇼핑 '일사천리 사업' 추진

홈쇼핑이 올해도 중소기업중 앙회와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확보 및 홍보를 위한 '2024년 일사천리(一社千里)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132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10일 홈쇼핑에 따르면 '일사천리'는 전국의 광역·도 지자체 및 중기중앙회 각 지역본부와 연계해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상품과 특산품을 발굴해 TV홈쇼핑 방송으로 판매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 시작해 매년 사업을 확대해 나가며 그동안 1376개 이상의 지역 우수 중소기업을 TV홈쇼핑에 소개해 판로확대 효과를 누렸다. 무엇보다 영업 유통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를 제시, 진입장벽을 낮춰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승호 기자